

생명 소생 '자동심장충격기' 방치... 위급 상황 '유명무실'

광주 아파트·공공기관 관리 실태 보니

골든타임 필수장치 관리 부실
매뉴얼 안지키고 자체점검 허점
광주 1334곳 1809대 설치
시민들 보관 장소 제대로 몰라
직원 부재시 문 닫혀 이용 불가

'이태원 헬러원 참사'로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광주지역 AED관리 실태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무설치시설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AED관리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패드와 배터리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교체되지 않았고, 아예 배터리 자체가 방전돼 있는 경우까지 있었다. 주민들은 AED가 어디 설치돼 있는지 알지 못했고,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경우에는 점심시간과 퇴근시간에 사무실이 잠겨있어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광주시는 올해 9월 기준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민방위대피소, 전통시장, 전시장, 복지관 등 총 1334곳에 1809대의 AED가 설치돼 있다고 3일 밝혔다.

심장지환자에게 CPR을 하면서 AED를 사용하면 환자의 생존확률도 높아진다는 것이 응급의료



2일 광주시 북구 오치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AED설치 안내는 있지만 점심시간 안내판이 걸려 있는 채 문이 잠겨 있었고(왼쪽) 배터리의 유효기간(점심 안)도 5개월 가량 지난 상태였다.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AED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일보 취재진이 돌아본 광주지역 5곳의 의무 설치 대상 아파트에는 AED가 설치된 데 있으나 3곳은 관리 상태가 엉망이었다.

광주시 북구 오치동의 1170세대인 한 아파트에서는 AED가 한 대 설치돼 있었지만, 배터리가 방전돼 있어 작동하지 않았다.

인근 1600세대의 아파트에서는 AED가 4대(관리사무소 2대, 경비실 2대) 설치돼 있었지만, 관리사무소 내부에 있는 AED 2개는 모두 사용불가 상태였다.

가슴에 붙이는 패드의 유효기간이 2019년과 2020년이었고, 배터리의 유효기간도 5개월 이상 지났기 때문이다.

광주에서 AED를 제작하는 업체 관계자는 "유효기간이 지난 배터리는 충전이 되지 않아 전기충격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패드의 경우에는 전기를 전달하는 '젤'이 경화돼 위급한 순간에 성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는 예산이 편성돼 주기적으로 바꾸는 편이지만, 아파트의 경우 수십만원의 교체 비용이 부담돼 알고도 바꾸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AED의 패드와 배터리는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유효기간 지나 배터리 방전되고

설치한 곳에서 각각 2년, 5년에 한번씩 교체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실태도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AED는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하지만 AED 의무설치시설의 관리자가 '응급의료지원센터 전산망'에 등록된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관리자가 '이상없음'으로 기록하면 끝나는 것이다.

실제 한 아파트의 AED는 배터리 건전지 교체 예정 일자가 2022년 5월 30일로 지났고 패드의 유효

기간도 2년 이상 만료된 상태였지만, 자체 점검 표에는 '이상없음'에 체크돼 있었다.

AED가 관리사무소 내부에 있어 점심시간과 퇴근시간 이후에는 이용이 불가능한데도 '24시간 이용 가능'이라고 표시돼 있었다. '관리책임자만 열 수 있도록 폐쇄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기관내 다른 직원 또는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는 피할 것'이라는 관리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 아파트의 AED 관리자는 "관리 소홀은 맞지만 다른 곳에 쓸 예산도 부족해서 어쩌다 한번 쓸까 말까 한 AED에 수십만원씩 투자할 여유가 없다"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무 설치구역이라고 해도 면적이나 시간이 고려되지 않고 한 대의 AED만 설치된 곳도 많아 4분의 골든 타임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남구 주월동의 594세대 한 아파트는 경비실과 관리사무실에 AED 2대가 설치돼 있지만, 구석진 동 의 경우 1층에서 가까운 관리사무실까지 전력질주를 해야만 4분 안에 다녀올 수 있었다. 고층의 경우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곳도 의무설치 대상이다. 하지만 광주시 서구 유스퀘어 종합버스터미널은 연면적은 14만240㎡인데도 AED는 1층 정문 오른쪽에 한대만 설치돼 있다. 건물내부에서도 설치장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유도안내판 설치를 하도록 돼있지만, 유스퀘어에는 유도안내판이 없었다.

광주시청 관계자는 "현재 의무설치대상이 있지만, 몇개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아동학대 부실 대응 초등학교 또... 별 조치 없이 귀가시켜

의심 정황 발견하고도 경찰 신고만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학대 피해 아동들을 귀가조치해 부실대응 지적을 받았던 초등학교가 또다시 부실대응 논란에 휩싸였다.

3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광주시 동구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달 27일 학생 A(10)군에 대한 학대 의심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경찰 신고만 하고 보호조치 없이 A군을 귀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학교가 학대 피해 의심 학생과 보호자 간 분리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조차 파악하지 않는 등 학생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A군은 왼쪽 팔에 크게 멍이 든 상태였으며 같은 반 친구가 "A군이 가정폭력을 당한 것 같다"고 교사에게 학대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학교 측은 학교 시간 10분 전인 오후 1시 40분께 112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으며, 이어 A군을 공장 귀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학원까지 찾아가 A군을 만나 면담을 진행했으며, A군 의사에 따라 분리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사 결과 A군 모친은 '공부는 안 하고 오락만 한다'며 A군을 금수 봉으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 모친을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A군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전담 기관인 광주 해바라기센터 조사를 거쳐 보호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해당 학교는 지난달 18일에도 가정 폭력 피해 의심을 받던 B(12)군에게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당시 학교는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해야 했음에도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한 차례 전화 시도만 했으며,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SPO는 가정폭력이 아닌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만큼 적절한 신고처가 아니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5개월 영아 모텔 홀로 방치

숨지게 한 20대 부모 구속

5개월 영아를 모텔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구속됐다.

김해진 광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어린

자녀를 장시간 모텔방에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상 아동학대치사)로 20대 초반 부모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6시 45분께 광주

시 서구 치평동 한 모텔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후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아이를 모텔방에 혼자 놓아둔 채 일을 하러 나가며 수일에 걸쳐 장시간 방치한 정황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층간소음 불만' 잇집 부부 살해... 2심도 무기징역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파트 이웃 부부 등 4명을 사상케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35)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선고를 유지했다. A씨에게 내려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자정께 여수시 덕충동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B씨와 딸다툼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고 집안으로 들어가 B씨 부부를 살해하고 B씨 부인의 60대 부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B씨 부부와 다투어 오다 지난해 8월 온라인에서 흉기를 구매하는 등 살해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심신 미약·상실로 인한 범행이라는 점과 자수를 한 점 인정받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참혹하게 숨졌으며 남은 유족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사회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참회하고 속죄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양형배정을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강진원 군수 선거법 위반 무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강진원 강진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지난 1일 강 군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전남경찰은 선거를 앞두고 강진군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있던 강 군수를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강 군수와 함께 온 A씨가 지급에서 현금을 꺼내 식사 참석자에게 건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 군수의 동행인이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현금을 꺼냈지만 사전에 공모한 정황과 증거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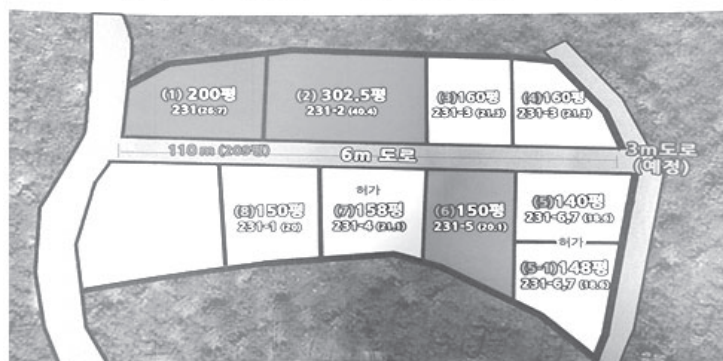
장성토지 매매 (분양)

경매교육 [기초반]

- ▶ 장성댐 5분 (광주에서 20분)
- ▶ 즉시 건축 가능 (토목공사 완료)
- ▶ 공기최고(축사없음), 소나무 숲
- ▶ 장성댐, 등산로 (남동향)
- 100평, 150평, 200평, 700평 (분할 가능)



해누리 전원토지분양 (상오2안)



* 경매 실전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 분)

▶ 경매 물건 추천 ◀

광주	광산구 우산동 (근린상가) ▶ 감정가 6억1천 → 최저가 3억4천
	광산구 수완동 (윤슬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3억5천
	서구 풍암동 (근린주택) ▶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5천7백
	서구 매월동 (임야) ▶ 감정가 6억2,700 → 최저가 2억2천
	북구 신안동 (공정) ▶ 감정가 13억 → 최저가 9억2천
	서구 매월동 (빌라) ▶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5억3천
	남구 봉선동 (아파트23평) ▶ 감정가 2억 → 최저가 1억4천
	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

010-6670-9800

010-2614-9801